

· 목표

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의 불가침 환경 마련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(정치교육, 공민교육, 시민교육-정책학습) 제도 구축

I 목 표

1. 필요성 및 의의

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, 청소년을 개인과 국가, 국가교육의 본질 등의 국가 중심의 관계성의 시대에서 4.0시대로 진화하면서 교육의 가치는 국가에서 개인, 즉, 보충성의 원리가 새로운 아젠다가 될 것이다.

정치교육, 시민교육, 공민교육 등 선진국은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이 된지 오래이다.

국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2017년 9월에 ‘민주시민교육 지원법’을 발의 한 상태이나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.

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76번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(교육부)가 가장 근접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인류 평화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적 소양의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. 그래서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.

독일의 헌법 제1조

-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.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.
-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•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,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.
-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 • 행정권 • 사법권을 구속한다.

모든 사회 제도의 잣대를 독일의 헌법처럼 제정한다면, SDGs 16번 목표인 평화와 정의로운 인류사회로 진화할 것이다.

선진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의 헌법도 참조하기를 바란다.

평화는 인간의 존엄에서 시작하며, 오직 제도와 학습이다.